

이재용을 구속하라



다른 재벌 총수들도 구속하라

헌재는 주저 말고 탄핵을 결정하라

이재용 구속을 둘러싼 정치 갈등은 역설이게도 지배계급에게 박근혜 제거의 시급성을 일깨워줬을 것이다. 특검이 빠르게 박근혜를 조여든 것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지배계급 다수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대중에게 가장 증오받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빨리 식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노무현 탄핵 때와 비교하면, 현재의 7차 변론까지 걸린 시간이 절반이다. 6, 7차 변론기일에는 박근혜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증거들을 상당히 빼고도 많은 증거들을 채택했다.

이는 박근혜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심리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현재의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탄핵 결정을 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도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행위들이 추가로 폭로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압박, 세월호 참사 등 여론 조작용 우파 집회 등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이 청와대였다. 우파 집회 동원 자금은 전경련에서 나왔다.

박근혜의 지시 아래, 김기춘이 기획하고 조운선(정무수석)이나 우병우(민정수석) 등이 연출의 일부를 맡은 공작 정치 작태였다. 조운선은 청와대에서 초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와서 그 실행도 맡은 것이다.

박근혜의 '유신 DNA'를 보건대, 문화예술계 단속에 사용한 블랙리스트 작업이 노동계나 사회운동에 적용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세월호 유가족 탄압, 진보당 해산, 진보당 관련자들과 '노동자의 책' 대표의 국가보안법 구속 등이 그런 사례들일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도 총리실 산하로 위장한 청와대·국정원 주도의 민간인 사찰이 벌어졌다.



대중의 박근혜 퇴진·구속 염원을 보여 주는 상징물.

따라서 이런 가증스런 정권은 하루 빨리 끝장나야 한다. 황교안이 우파 전열 정비를 위한 시간을 벌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조처의 하나로, 퇴진 운동이 헌재에 더 강하게 탄핵 결정을 압박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치적 재판

국회의 탄핵소추안 압도적 가결이 거대한 민중 운동의 압력 때문이었듯이, 현재의 탄핵 결정도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헌법 재판 자체가 형사재판과 달리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이다.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3권분립론자들의 한가한 소리처럼 사법권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절차 안으로 대중 투쟁의 잠재력을 가두는 문제도 아니다. 포악무도한 정권에게 민중이 투쟁으로 내린 정치적 심판을 국가기관

이 수행하라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활력 있는 대중 운동이 자기 힘에 바탕해 헌재와 특검을 압박하는 것은, 주류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운동을 제도권으로 수렴시키는 것과 다르다. 매우 상이한 운동의 동학이다.

퇴진 운동 초기에 주류 야당들이 운동을 지지하는 시늉을 하며 탄핵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에는 명백하게 운동의 활력을 국회로 수렴해 주류 정당들 간의 협상 문제로 바뀌치기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럴 때에는 운동이 국회 주도 탄핵을 지향해서는 안 되고, 거리 운동에 참여하는 진보정당이 이에 찬성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비판한 것은 옳았다.

거리의 독립적인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겠다는 수단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투쟁 방식이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민중의 힘을 옹골게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로 나선 많은 사람들은,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별 쓸모도 없게 행동한 주류 야당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기도 했다.(물론 차기 대선에서는 대중적으로 검증된 진보·좌파적 정치대안이 없다고 대중이 판단해 차선론(또는 차악론)에 근거한 선거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실제 벌어진 일은 주류 야당들이 운동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분노와 힘에 제도정치권이 떠밀리

고 심지어 집권당은 둘로 쪼개지며 탄핵소추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이었다.(그 이후로도 주류 야당들은 운동에 한 발 걸치고는 자신들 지지를 향상에 운동을 이용하려고만 했다.)

결국 대중 투쟁의 힘 덕분에,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이 보수 일색이라는 문제도 부차화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된 정치적 맥락이 운동 초기 주류 야당들의 의도와 달라진 것이다. 퇴진 운동이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일단 시작된 특검이 기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으로 이재용·김기춘 등의 구속 기소 촉구 등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과 같다. 물론 이는 특검을 응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지금 헌재에 꾸물대지 말고 탄핵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려는 황교안 내각과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우파에 맞서는 정치 투쟁의 성격을 띤다. 좌파는 자신이 머릿속에서 그려낸 지형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파와 쟁투가 벌어지는 곳에 개입해야 한다.

이런 사회세력 간 쟁투에서 형성되는 세력균형이 이후 정국, 가령 대선과 차기 정권의 초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사람들은 일터를 비롯해 삶의 터전 곳곳에서 스스로 행동에 나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김문성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리

지난해 12월 21일 사상 최대 인원(1백25명)으로 출범한 특검이 1차 조사 기한(70일)의 반환점을 돌기 직전이다. 특검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가성 기금출연 강요, 정유라 특혜 등 15가지를 수사 항목으로 꼽고 있다.

이제까지 특검은 삼성과 박근혜의 뇌물죄 성립 입증에 집중해 왔다. 부정 부패의 핵심에 박근혜가 있음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익 공유 관계

청와대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 미르재단 쓰레기통 설치까지 관여했을 정도다.

검찰 재판장에서 전경련 부회장 이승

철의 증언을 보면, 청와대에서 열린 재단 설립 관련 1차 회의 때 청와대는 전경련에 재단 설립 기한과 기업 명단, 금액까지 지시했다. 당시 경제수석 안종범은 정부 예산을 부어서 재단을 운영할 것이라 말했다.

더블루케이 부장 류상영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최순실은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더블루케이를 계열사로 두는 지주회사 인투리스를 세워 자기가 회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뒀다. 두 재단에 들어간 돈을 본인 소유 회사를 거쳐서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게 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와 최순실이 아주 오랜 시간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이였으니 이 돈의 최종 목적지는 박근혜의 주머니였을 것이다.

평창올림픽은 둘의 주머니 불리기에 호재였다. 최순실의 더블루케이가 평창올림픽 시설물 건축 사업에 뛰어 들려고 끌어들이 '누슬리' 사가 올림픽 개·폐막식장 건설 사업에서 탈락하자, 박근혜는 교육문화수석 김상률과 경제수석 안종범을 질책하고 업체 재검토를 지시했다. 심지어 평창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이 누슬리 배제 경위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하고 감사원까지 나서서 이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당시 문체부 장관 김종덕이 로비에 나섰다.

그뿐 아니라 최순실 소유의 평창 토지에 박근혜 퇴임 후 지낼 사저('아방궁')를 짓고 주변에 최순실 일가 타운을 지으려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이 폭로됐다. 올림픽 개최로 생기는 인프라

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한편, 최순실이 청와대 인사와 공기업 인사에도 입김을 행사한 증거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당거래

두 재단에 7백74억 원을 내놓은 재벌들은 청와대에 여러 '민원'들을 청탁하며 '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리려 했다.

2백억 원을 낸 삼성은 이재용 경영세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결정적 성과를 거뒀다. 박근혜가 수차례 강조해 온 의료 민영화나 메르스 늑장 대처도 삼성의료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특검은 삼성 이재용에게 4백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묻고 있다.

삼성은행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를 공시한 직후 대한승마협회의 중앙기 로드맵에 무려 5백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연히 정유라가 지원 선수 명단에 추천됐다. 그해 7월 국민연금의 찬성 덕분에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지면서 이재용은 경영 세습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후 이재용과 박근혜의 독대가 이뤄졌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는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특검 구속 1호 신세가 됐다.

8월 삼성전자는 최순실 모녀가 독일에 소유한 코어스포츠와 2백20억 원 대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9월, 10월에는 최순실 측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80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미래전략실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그뿐 아니라 10월에 미르재단에 1백25억 원을,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2016년에 삼성은 케이스포츠재단에 다시 79억 원을 내놓았다.

박근혜는 공기업 인사에 직접 개입했을 뿐 아니라 삼성에서 받은 후원금 액수와 임원들의 이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SK도 조사 대상이다. 박근혜는

문재인·이재명·박원순·반기문의 비정규직 정책 반동적이거나 아주 불철저하다

한국 인구의 80퍼센트 가까이가 노동계급 사람들이다. 그만큼 노동(계급) 문제는 한국 사회 개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중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보수 정치권의 선두주자인 반기문은 “진보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했지만, 실제 행보와 기반을 보면 ‘진보 반, 보수 반’이 아니라 ‘이명박 반, 박근혜 반’이 정확한 묘사일 듯하다.

“특권 계층이 이 사회에 너무 많다. 심지어 노동계도 특권층이다. 자기 주장만 계속 해대고 그 주장을 하다가 안 되면 거리를 뛰쳐나와 억지를 부리고 하면 대타협이 안 된다.”

낡은 노동귀족론에 권위주의적 발상은 청년 일자리 문제에 인턴제 확대나 ‘해의 자원봉사나 하라’는 파위의 ‘해법’을 내놓는 것으로 이어진다. ‘비정규직 헬조선’을 유지하지는 것이다.

여야 통틀어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은 최근 자신의 차기 정권 구상을 담은 《대한민국이 묻는다》(문재인 · 문형렬, 21세기북스, 2016, 이하 ‘문답’)을 내놓았다. 그런데 노동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독립된 항목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그의 당내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 존중 특별시장’을 자처하는 것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거의 동시에 발간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이재명, 미디어, 2016, 이하 ‘이재명’)에서 적은 분량이지만, ‘노동소득’을 독립된 한 장으로 다룬 것보다도 성의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공공부문 일자리 대거 창출을 주장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지의 최신 일자리 90퍼센트가 모두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위

기 시대에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자리들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 지금도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차별의 온상 중 하나인데 말이다. 노동시간단축 얘기도 구체성이 없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데, 경제 위기 시대에는 그런 계급타협책이 쉽지 않다. 분배의 원천인 성장을 위해 착취율을 올리고자 하는 기업주들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와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 내내 국회에서 보여 온 태도다.

문재인과 이재명 둘 다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규제해 일자리를 늘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기존 장시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이나 노동강도 강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 불분명하다. 또한 주당 52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도 연장근로인데, 이를 노동시간 제한 기준으로 삼자는 것은 한참 부족해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거 직접고용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 통제를 이유로 임금과 복지 등에서는 차별이 유지된다. 박시장이 박근혜 정부와 정면 대결하

지 않고, 주어진 틀 안에서 개선을 추구해 온 탓이다. 이런 어중간함이 퇴진 운동 국면에서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한 이유일 것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비정규직 정책은 그동안 민주노총이나 진보 · 좌파 정당들이 개혁 과제로 제시해 온 것들보다 온건하고 철저하지 못하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 당선에는
오바마 책임도 있다

★ 미국 트럼프 정부 개각
온갖 수단을 동원해
패권을 지키려는 강성 우익

★ 중국의 시드 보복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

★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요구
정권 맞춥 보도를 끝내자

★ 이화여대 정유라 비리 한 눈에 보기
부패한 정부와 대학의 ‘부당거래’

★ 문화계 블랙리스트
저항 정신을 옥죄려는 악랄한 탄압

★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자본주의가 자연히
사망할 것인가?

★ 쿠바 혁명 —
진정한 변화를 위한 교훈



2015년 SK의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창근을 만났고 이 만남 직후 SK 면세점을 청기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7월 박근혜는 특별 사면 대상으로 SK를 지목하고 그 근거를 SK가 만들어 보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최태원은 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사면됐다. ‘사면 거래’ 이후 SK 측은 “하늘 같은 은혜”에 “감사”하다며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1백11억 원을 내놓았다.

CJ 이재현은 지난해 광복절 사면을 받았는데 CJ는 두 재단에 13억 원을 냈다. CJ는 차은택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K컬처밸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두 재단에 45억 원을 낸 롯데는 2015년 하반기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신동빈과 박근혜 독대 이후 결국 신규 특허를 받았다. 롯데는 5백억 원 규모로 평창올림픽 후원도 결정했다.

전방위적

특검은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이화여대 교수 류철균은 수업에 출석도 하지 않는 정유라에게 학점을 주고는 교육부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협박해 대리 시험지를 작성케 했다. 정유라 입학 이후 이화여대는 정부재정 지원 사업 9개 중 8개를 싹쓸이 해 1백85억 원을 지원받았다. 전 총장 최경희 등에게 구속 영장 청구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17일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 관리를 주도한 조윤선과 김기춘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오리발 내밀기로 일관하던 조윤선은 결국 1월 9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시인했다. 증인 불출석으로 망탕으로 끝난 국정조사 청문회가 건진 몇 안 되는 ‘성과’였다. 박근혜 정권이 통치 유지 · 강화를 위해 방송 장악과 검

열, 여론몰이까지 서슴지 않은 부패한 집단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정조사에서 〈세계일보〉 전 사장은 청와대가 대법원장 양승태를 사찰해 왔다고 폭로했는데, 이런 상황은 박근혜가 정권 반대파뿐 아니라 광범하게 불신과 견제를 해 왔음을 드러낸다.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가 날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감옥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한 데서 보듯이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미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에 대한 큰 그림은 그려진 만큼 앞으로의 판건은 공식적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정권 퇴진 운동이 더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지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과 노동자·여성의 목소리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돌아보는 목소리 중에 ‘퇴진 운동 내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실종됐다. 노동자들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견해가 있다.

사실, 퇴진 운동에는 이런 주장이 나올 만한 특성이 있다. 조직 노동자 운동은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 왔다. 특히 지난해 8~9월 공공과업과 철도 파업 등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타오르도록 하는 연료 구실을 했다. 이렇게 퇴진 운동의 초석을 놓았음에도 조직 노동자 운동은 그 운동에서 정치적 헤게모니(주도권)를 쥐지는 못했다. 부분적인 투쟁들은 있었어도 전반적인 계급투쟁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주류 야당, 특히 민주당이 첫 정치적 수혜자가 된 듯하다.

이런 정치적 역관계 속에서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내 온건파인 엔지오들은 이 운동에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비중을 제한하고자 했다. 엔지오들은 본무대에서 민주노총과 민중진영의 발언이 지나치게 많다고 문제 삼는가 하면, 민주주의 권리(집회 자유) 문제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 요구조차 공식 구호로 외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다행히 좌파 측의 반격으로 엔지오의 노동 비중 축소 시도가 언제나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운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던 노동자들의 기여가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워 온 노동운동 투사들 일부가 퇴진 운동에 아쉬움을 느꼈을 법하다.

운동의 이런 균형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운동 저변에 흐르는 논리는 정치적 부패에 대한 항의의 이상이다. 이 운동의 내재적 논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무자비한 이윤 논리와 모순된다. 항의 운동 참가자들의 마음 속에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로 누적된 불만, 뿌리 깊은 계급 격차에 대한 분노,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생해 살면서도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들 전체에 대한 증오심들이 깔려 있다. 그래서 종종 무대 위에서 자유발언권을 얻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발언에 참가자들은 자기 일처럼 환호했다.

좌파와 노동계 투사들은 대중의 이런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퇴진 운동이 단지 가장 부패한 개인들 몇몇을 제거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박근혜가 추진해 온 나쁜 정책들에 맞서고, 특히 노동자들이 이런 정치적 기회를 이용해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애써야 했(한다). 운동의 급진화 · 심화를 위해 퇴진행동 안팎에서 적극 개입하고 논쟁해야 했(한다).

여성

한편, 양성 분리적 여성주의자들의 일부는 이런 주장을 한다.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비판을 ‘여성’의

문제로 보는 ‘여성혐오’와 여성 차별적 표현 · 태도들이 만연해, 여성이 운동 내에서 ‘타자화’됐다”는 것이다.

집회에서 부패한 지배자의 문제를 엉뚱하게 ‘여성’의 문제로 돌리는 등등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퇴진 운동에 워낙 광범한 사람들이 참가하다 보니, 박근혜 퇴진에 동의하더라도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후진적인 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언행을 하지 말자는 여성운동 측의 이의 제기는 타당한 것이었다. 다행히 집회 주최 측은 운동 초기에 이런 이의를 신속히 받아들여, 참가자들에게 차별받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지시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성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행이 이 운동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여성들이 이 운동과 일체감을 느껴며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겠는가. “박근혜가 여자라서 못한 것이 아니다. 여자 들먹이지 말라”는 발언들도 큰 지지를 받았다.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여성 차별 · 비하가 만연해 여성들은 배제되고 타자에 머물렀다”는 인상은 여성들이 이 운동에서 한 적극적인 참여와 주체성을 무시하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

잠재력

참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들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운동은 오히려 해방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여성들은 사회를 보거나 행진 차량을 이끌었고,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펴는 등 이 운동의 중요한 일부다.

사실, 급진주의 여성운동이 여성 차별 · 비하 금지 메시지 전달에서 멈출 뿐, ‘여성 대통령’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평범한 여성들의 처지 악화를 폭로하며 그러한 여성들의 요구(시간제 일자리 반대, 보육 확충, 낙태 합법화 등)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거대한 운동이 일어나 큰 연대감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들은 지지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의식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가지 좋은 사례로,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 결의문 낭독자에 여성 · 성소수자 단체들이 포함된 것을 들 수 있다.

노동자 · 여성의 목소리가 운동에서 더 부각되기를 바라는 정당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운동이 박근혜 개인의 퇴진에서 더 나아가 착취받고 차별받는 대중의 운동을 고무 ·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현주

